

고령화시대 한국의 복지 프로그램과 새로운 노년 주체의 형성: 서울 K복지관 도시락 배달사업의 사례¹⁾

이현정*

1. 들어가며

한국은 1970년대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다. 1983년 만 해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8퍼센트에 불과하던 한국은 2000년에 7.2퍼센트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3퍼센트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이르고, 2026년에는 20.8퍼센트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12a). 고령화는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인 면모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 진행이 서구의 어느 발전된 국가보다 급속하게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조교수, anthrolee@gmail.com

1) 본 논문의 초고는 2013년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초고에 대한 토론과 비평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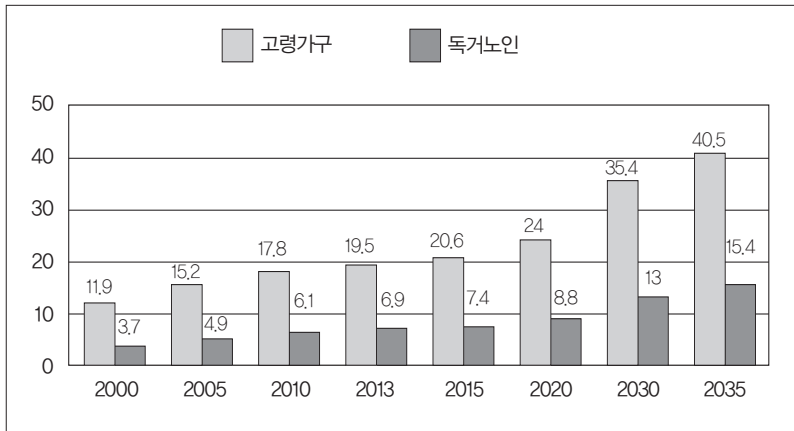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노년²⁾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현상 — 독거노인의 증가 및 높은 노인자살률 — 이 고령화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미디어 및 학술담론에서 강조되어 왔다(김형수 2000; 김경혜 2014).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각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독거노인’이라고 불리는 65세 이상의 남성이나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노년 독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 당시 독거노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7퍼센트에 불과했지만 2013년 현재 6.9퍼센트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2035년에 이르면 무려 전체 가구의 15.4퍼센트가 독거노인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참조).

엄밀히 말해 노년 독신가구를 그 자체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중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자녀들과 따로 거주하는 독립적인 생활을 자진해서 희망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고영미·조영태 2013). 또한 젊었을 때부터 비혼의 독신가구로 살아오다 65세

2)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고령의 남녀 개인을 통칭할 때 ‘노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늙음 혹은 무력(또는 힘없음)을 그 연령층에 속한 개인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환원해 버리는 용어의 부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노인’이라는 단어가 당사자들로부터도 점점 기피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대체어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만일 노인을 ‘노년’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년으로 바꾸었다. 노년은 ‘청년’이나 ‘중년’처럼 연령 차이를 함축하지는 하지만 보다 중립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나 ‘독거노인’처럼 대체할 경우 의미 전달에 무리가 있거나 도리어 혼란을 가져온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원래대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라는 표현 대신 ‘노년 남성’과 ‘노년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노인 개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화적 함의에 관해서는 정진웅(2006, 201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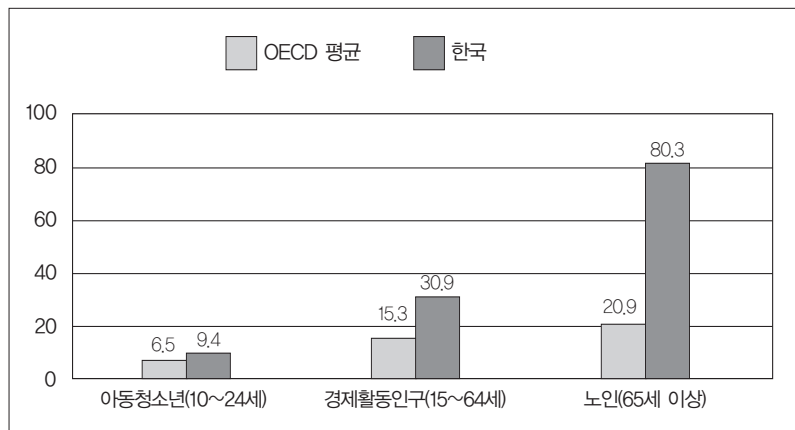


[그림 1] 고령가구 및 독거노인가구의 구성비(자료: 통계청 2012b)

이상이 되어서도 평균 이상의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 지위를 누리는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있다(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그렇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년 독인가구를 구성하는 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고령, 농어촌지역, 여성, 저학력,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건강위험집단'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둘째, 고령화담론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온 또 다른 사회적 문제는 '높은 노인자살률'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해 왔다(보건복지부 2014; OECD 2014).³⁾ OECD 국가 간 자살률 차이를 연령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노년 인구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그림 2 참조).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자살률은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

3) 세계보건기구에 자살률을 보고한 국가 중 한국은 그린란드(Greenland)와 리투아니아(Lithuania) 다음으로 세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국가이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 기준 28.1명이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38.2명, 여성 18.0명이다.



[그림 2] 연령대별 OECD 평균 자살률과 우리나라 자살률 비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당 81.9명으로 전체 자살률 31명에 비해 무려 세 배의 격차를 드러낸다. 전체 자살률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노인자살률은 65~74세(한국 42.6: 일본 31.2)와 75세 이상(한국 96.0: 일본 36.7)의 구간 모두에서 한국에서 뚜렷이 높게 나타난다(통계개발원 2007: 10).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는 주로 독거노인과 노인자살을 중심으로 ‘고령화 위기(aging crisis)’담론을 생성하며 진행되어 왔다(정순돌·박현주·김보경 2011; 정순돌·김성원 2012; Castles 2002). 특히 보건·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과정이 빠른 경제성장 및 사회구조의 변동 속에서 노년 인구가 빈곤, 고독, 질병, 실업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고 진단해 왔다(박광준 1999; 선우덕 2005; 정순돌·김성원 2012; 김태한·고준기 2013). 그리고 자살은 이러한 급격한 구조 변동 속에서 자원과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노년 남성과 여성들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노용환·이상영 2013).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노년 인구와 관련된 문제들이 '위기담론'의 성격 을 띠고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회자되는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 구집단은 점차 '특별히 주목되어야 할 국가의 시민 주체'로서 정치적 공간 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먼저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으며, 2004년에는 이 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했다. 이후 2005년 6월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 구로서 발족했다.⁴⁾ 그러나 고령화 및 노년 주체에 대한 정치적 문제의식은 단순히 행정기구의 개편과 정책 및 법제 제정을 넘어선다. 예컨대 2012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각 정당이 주요 공약 으로서 내세운 '노인복지'정책들과 고령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양상 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한국에서 어떻게 '노인'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성격의 주체로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현외성 2002).⁵⁾

한편 노인을 '법적 연령 65세 이상'이라고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따 라 정의내리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보 건학적 입장과 달리, 인류학적 관점에서 노인 혹은 노인복지를 다루는 것 은 개념적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에 부딪힌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인류학 내에서 노인 연구의 계보를 좇다 보면, 예컨대 종족집단에 대한 연 구나 농민 연구, 가족 연구, 전통문화 연구 혹은 생애사 수집을 통해 이루

4)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되었다.

5) 다음은 2012년 총선 당시 한 신문 기사의 내용이다. "여아가 4·11 총선을 앞두고 3일 간격으로 내놓은 노인 공약이 '판박이'이다. 선거 '단골' 메뉴인 '노인 틀니' 지원 등은 "안 봐도 내용이 뻔하다"는 빈축까지 나온다. 공약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4년 동 안 정치적 공방만 벌이다 선거 때만 되면 고령층 표심을 붙들기 위해 다시 목은 과제를 꺼낸다는 지적이 많다"(『서울신문』, "4년마다 꺼내는 노인공약 '판박이,'" 2012. 4. 16일자).

어지는 연구들처럼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핵심적이거나 다수의 연구 참여자가 되는 연구들을 과연 '노인 연구'라고 지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예컨대 윤택림 2001, 2011; 최호림 2010; 김광영 2012). 그렇지 않다면 연구 주제 면에서 '노인 됨'이나 '노년의 삶' 자체를 집중하여 다루는 연구만을 노인 연구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예컨대 정진웅 2006, 2011).

이러한 질문은 역설적으로 노인이 연령주의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회담론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만일 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 규정되는 사람들 내지 '노인 됨의 특성'만을 노인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65세 이상'이라는 보건복지정책의 연령주의적 개념을 거꾸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직종과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노인으로 범주화되고 있는가는 심히 의문스럽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들은 노인이라고 간주되지 않으며, '개성실향민', '월남전 참전용사', '일본군 위안부', 심지어 (대부분 고령자인) 농촌 여성'들도 노인이라고 거의 범주화되지 않는다. 결국 미디어든 학문담론이든 간에 노인이라는 개념은 모든 종류의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며 특정한 계급적 집단을 지칭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독거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단어적 의미 이전에 '가난하고 외로운 늙은 몸'을 뜻하는 것처럼, 그리고 '노인 학생'은 존재해도 '노인 교수'나 '노인 선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나향진 2006), 노인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그 개념부터 연령적인 함의보다는 계급적 함의를 띠고 있다(정희진 2003).

노인 개념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계급적 특성은 왜 노인복지가 이 시대에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준다. 서구에서 노인복지가 사회적인 담론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 속에는 싸고 생산성 높은 인력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시화·산업화 과정 속에서 노동인구가 되지 못하는 존재들을 사회성원으로 포섭하

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경제논리가 작동되어 왔던 것처럼(김주현 2009),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노인복지는 어디까지나 연령주의의 논리에 기대어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부터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연구는 '빈민', '장애인', '농민' 등을 문제 삼을지언정 노인 연구로부터 비껴 나가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조문영(2001)의 연구는 난곡의 주민들이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가난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역설적 양상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논의 속에 등장하는 노인은 연령 자체보다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욱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으로 자기 규정하는 빈민의 전략 속에서 수혜자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나 빈민으로 정체화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태도는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역설적으로 노인을 또다시 "편협함, 응졸함, 이기심"의 존재로 규정하게 되고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조문영 2001: 250).

이러한 배경 속에 본 논문에서는 연령적 개념으로서 노인이 갖는 생물학적·역사적·문화적 특수성 내지 공통분모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하거나 그러한 특성을 찾거나 노력하기보다는, 거꾸로 한국 사회에서 인구 구성의 변화 속에 등장한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적·담론적 움직임을 새롭게 진행되는 '노인 만들기'의 기획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현상을 인류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김태우 2012; Cohen 1994).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경제활동, 소득보장, 의료 지원, 사회 참여,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기에서는 제한적으로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도시락 배달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도시락 배달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의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담당 사회복지사가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끼니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각 지역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종교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서울시 북부에 위치한 K복지관에서 수행되는 도시락 배

달사업을 통해, 한국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양한 노인 행위자들이 노년의 삶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과 의미를 생성하는가를 살펴 보고, 나아가 현재 한국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노인 주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오늘날 한국 사회의 노인복지담론과 실천이 노년 주체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는 2013년과 2014년 서울시 북부 지역에 위치한 K복지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년 남성과 여성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⁶⁾ 총 14개월 동안 매주 정해진 요일에 하루씩 K복지관으로 출근하여 도시락 배달사업의 배달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으며, 배달 작업을 마친 오후에는 K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면서 수십 명의 참여자들과 비공식적 면담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개인 경험과 생애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방법에 동의한 총 28명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매번 1~2시간씩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개별적으로 약속하여 가정 방문이나 복지관 상담실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취되었다. 본 연구는 K복지관에 정식 공문을 통해 연구 승인을 받았으며 IRB심의를 통과하였다.

다음 <표 1>은 총 28명의 심층 면담 피면담자들 중 본 논문이 주목하는

6) 이 기간 중에서 2013년 7~8월, 2014년 2월 석 달은 연구자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도시락 배달사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만을 연구자가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표 1〉 도시락 배달사업 참여자

번호	이름 ⁷⁾	나이	성별	학력	가구 형태	사업 참여 성격
1	김인숙	76	여	중졸	독신	도시락 수급
2	박모지	83	여	무학	독신	도시락 수급
3	임정숙	89	여	무학	독신	도시락 수급
4	고환우	79	남	초졸	독신	도시락 수급
5	이분녀	84	여	무학	독신	도시락 수급
6	장기표	95	남	초졸	독신	도시락 수급
7	정섭민	84	남	대졸	독신	도시락 수급
8	허옥정	75	남	초졸	부부	도시락 수급
9	홍표승	90	남	고졸	독신	도시락 준비
10	박순이	91	여	무학	독신	도시락 준비
11	최하연	71	여	고졸	독신	도시락 배달
12	박사랑	27	여	대졸	알 수 없음	담당 사회복지사

K복지관은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으로 1996년 서울시 정부에 의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고자 설립되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 건물 내부에는 식당, 경로당, 미용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사랑방, 물리치료실, 서예실, 컴퓨터실, 강당, 헬스장, 탁구장, 재활치료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이 마련되어 있다.

K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법률·세무·심리·영양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홍보사업',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저소득 노인의 가정방문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사업',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재활 및 건강 증진

7)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인명과 지명은 모두 가명이다.

을 추구하는 ‘기능회복사업’, 주 6회 점심식사를 복지관 회원에게 2,500원에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포함한 ‘복리후생사업’,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이미지 개선을 추구하는 ‘시니어봉사대 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며 관찰한 도시락 배달사업은 재가복지사업의 일부로서, K복지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힌 바에 따르면 “거동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가 어려운 43명의 저소득 재가 어르신들께 주 7회 중식과 더불어 절기별 특식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도시락을 위한 음식 준비는 복리후생사업인 경로식당 운영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진행 양상은 다음과 같다.

오전 9시, 영양사를 비롯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출근하여 그날의 식단에 따라 밥과 반찬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미 복지관 앞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한정된 수의 점심식사 식권을 타기 위해 노년의 남성과 여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10시경, 경로식당 안쪽에 위치한 부엌에서 밥과 음식이 다 만들어지면 기다리고 있는 일손들에 의해 밥과 반찬이 각각 도시락 그릇에 나눠 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돕는 일손은 자원봉사자거나 노인일자리사업에 고용된 사람들로, 모두 노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도시락은 당뇨식과 일반식 두 가지 종류인데,⁸⁾ 반찬은 김치를 포함한 세 종류로 똑같이 이루어지며, 밥은 일반식일 경우에는 흰쌀밥, 당뇨식일 경우에는 잡곡밥이다. 도시락 그릇은 각각 가로 15센티미터×세로 8센티미터×높이 5센티미터 정도의 육면체 플라스틱 통으로 밥과 반찬 그릇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한쪽에서 밥과 반찬이 담긴 도시락 그릇이 준비되면, 다른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두유나 김, 굴 등 추가 물품이 하나씩 더해져 도시락 가방에 함께 담긴다. 도시락 가방의 색깔은 배달하는 사람이 구별하기 쉽도록

8) 2014년 7월부터 도시락 준비를 위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일반식과 당뇨식의 구분이 폐지되었다.

당노식과 일반식이 서로 다르다. 도시락 가방이 만들어지는 도중에 약 10시 반 정도가 되면 하나 둘씩 그날의 도시락 배달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배달원들은 대학생부터 젊은 직장인, 나이 든 사람 등 다양하다. 가방이 모두 준비되면, 재가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 배달원 이름을 호명하고 각 자에게 정해진 개수의 도시락 가방을 주면서 그날 배달할 장소를 일러 준다. 배달하는 도시락 가방의 개수는 개인에 따라 혹은 배달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해진 규칙은 없다. 노인일자리로 배달을 하는 사람 중에는 “너무 멀다”, “너무 많다”고 불평하며 바꾸어 달라는 사람이 가끔 있어 사회복지사가 달래느라 진땀을 빼기도 한다. 배달 장소에 버스를 타고 가야 할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준비한 교통카드가 배달원에게 지급된다. 배달을 맡은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배달 가정에 도시락을 갖다 드린 후, 그 전날 드린 도시락 가방을 회수하여 복지관 부엌에 있는 그릇 수거함에 분리하는 것으로 그날의 일정을 마친다.

위의 서술에서 나타나듯 도시락 배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참여자들은 크게 네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복지관 소속 직원들이다. 사업 결정 및 운영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관장으로부터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영양사, 조리사 및 배달지역 및 배달원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는 도시락 배달사업의 핵심적인 운영자들이다. 40대 여성인 복지관장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대학을 마친 지 몇 년 되지 않은 20대 여성이다. 파견 나온 20대 남성 공익근무자 한 명이 사회복지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 자원봉사자 집단이다. 자원봉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참여 동기는 다양하다. 즉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나 개인적 관심으로 찾아온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이 있고, 봉사 점수나 기업에서 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획득하고자 참여하는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도 꽤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단체로 봉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도시락 준비부터 배달, 부엌과 식당 정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한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고용된 만 60세 이상의 노년 남녀들이다. 이들은 구청에서 선정된 뒤 다른 복지관의 의뢰를 통해 K복지관으로 파견된 사람들로, 일부는 부역에서 청소를 맡고 있으며 일부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처럼 공공분야의 단순노동일 경우, 급여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참여하는 일수에 따라서 계산된다(보통 한 달에 12일간 참여하고 20만 원을 받는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쉽고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맡고자 애를 쓰며, 이를 위해 복지관 직원들과 늘 협상을 시도한다.

넷째, 도시락 배달사업의 수혜자인 노년 남녀들이다.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자격이 되지만, 실제로는 70대 중반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다(표 1) 참조). 이들은 구청의 지침에 따라 선정된 '재가복지 대상자'들 중에서 K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건강 상태나 식생활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후 도시락 수급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결정된 사람들이다. 도시락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한 배달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K복지관에서는 총 43명의 '저소득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이 네 집단 가운데 첫 번째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에는 겉으로는 딱히 구분되지 않는 노년의 남성과 여성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 집단의 성원들에 대한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년의 남성과 여성들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복지 대상자 선정의 논리

K복지관 외에도 많은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사업

은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⁹⁾들이 식사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거동 불편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의미는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관할하는 국가기관과 이를 시행하는 복지관 그리고 가정방문을 하는 지역 사회복지사의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주관적 판단과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참여자 간의 논쟁과 협상의 문제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국가정책과 마찬가지로 통계적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복지정책의 맥락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우선적으로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년의 개인이 국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구의 총소득 정도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경우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다달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8만 원에 이른다.¹⁰⁾

기초생활수급권이 반드시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9) K복지관에 종사자들은 ‘노인’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함의를 피하고자 노년의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대체어로서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개 20대인 사회복지사들이 이들을 호칭할 경우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대신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10)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 요건은 연령과 상관없이 그해에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못 미치고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앞으로 논문에서 다루겠지만, 이러한 요건들은 문서상으로 증명 가능할 때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014년 현재 국가에서 정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월 60만 3,403원이다. 따라서 노년의 독신남성이나 여성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고 부양의무자(부모·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두 형태로 주어지는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의 차액을 다달이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또 의료비·교육비·텔레비전 수신료는 현물로 경감 받는다.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비 중 최대 현금급여의 액수는 월 48만 8,063원이다.

노년 독신자의 관점에서 48만 원이라는 액수는 큰 병이 없는 개인이 열악한 주거환경이지만 월세를 내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금액이다. K복지관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은 설령 경제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심지어 본인 소유의 40평대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다른 이들을 선망하고 있었다. 비록 모든 수급권자들이 40여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달이 수십만 원의 수입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노년생활의 가장 큰 매력으로 인식된다.

K복지관 어르신들의 이러한 관점은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남성과 여성이 고정적인 현금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달이 이만큼의 현금을 고정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드물며, 받더라도 늘 미안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기 십상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껏해야 매달 20만 원 이상을 벌기가 힘들다.¹¹⁾ 이러한 조건 속에서 “훨씬 잘사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부러워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된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및 구청의 복지담당 직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이 제일 상황이 좋다”라는 노년 참여자들의 입장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따라서 도시락 배달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담당 직원과 사회복지사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일차적인 후보 대상에서 배제한다. 축적된 현장 경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오히려 수급권

11) 최근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창출된 노인일자리 115만 3,037개 일자리 중 87.8퍼센트인 101만 1,839개가 급여가 낮은 공공분야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분류되는데, 공공분야의 공익형·교육형·복지형의 경우 월 20만 원, 인력파견형의 경우 67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반면 민간분야의 시장형은 25만 8천 원, 시니어인턴십은 86만 원, 고령자친화기업은 72만 원, 시니어직능클럽은 102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뉴스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돈 안 되는 공공분야 일자리 태반,” 2013. 10. 29일자).

자의 바로 상위층인 저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도시락 배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사랑 씨(27세, 여성)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대상자는) 구청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결정되고 보통 저소득 독거노인이 1순위에요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아무래도 돈을 받으시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서 본인께서 돈을 못 버셔도 아들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지원은 못 받으니까 더 힘들 수 밖에 없죠

이처럼 한국 사회의 복지담론과 실천 속에서 누가 그 혜택을 받을 것인가의 기준인 경제적 어려움은 다양한 층위에서 고려되는 우선순위 간의 경합과 형평성에 대한 운영자들의 고려 속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통계학적 지표는 공문서와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상에 기록된 가족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관계 성격(직계혈족 혹은 그 법적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미 그 지표가 실제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담당자들도 아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담당 구청 직원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차상위층을 선택하는 대안을 모색해 보지만, 그 대안적 방법도 완전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는 없다. 결국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틈새'는 노년의 개인들이 복지정책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뿐 아니라,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수혜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적합성'을 과시하고 노력을 경주하는 경쟁의 장을 구성하게 한다.

도시락 배달자와 수급자로서 1년이 넘는 접촉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와

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거절해 온 차 씨(연령 미확인, 70대 후반 내지 80대 초반 추측, 여성)는 그러한 틈새에 성공적으로 끼어들어 간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녀는 구청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인정되어 매일같이 도시락 배달을 받는다. 그러나 연구자가 가정을 방문할 때면, 열려진 방문 틈새로 '런닝셔츠와 츄리닝' 바람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다 큰"(40~50대로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아들이 직접 도시락을 받는 것을 꺼렸으며, 차 씨도 아들의 존재를 숨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차 씨가 직접 나와서 받더라도 현관 입구에 놓인 구겨진 남자 구두 한 켤레는 아들의 존재를 쉬이 짐작하게 했다. 시간이 흐르고 연구자가 좀 친숙해진 다음부터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었다. 비록 차 씨는 연구자와의 면담을 "바쁘다", "아프다" 등의 이유를 대며 여전히 거부했지만, 이제 연구자가 도착할 시간에도 그녀는 자유롭게 외출했으며 아들이 직접 나와서 도시락을 받고는 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이미 차 씨가 아들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드리지 않을 근거가 따로 없다고 했다. 서류상으로 차 씨는 자녀와 별개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독거노인'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대한 좌절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더 심각한 것은 그 도시락을 어머님이 드시지 않고 아드님이 먹는다는 거죠. 아드님이 집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님은 폐지를 주우러 다니세요. 그러시지 말라고 해도 말씀 듣지 않으세요"라고 말한다.

"도대체 왜 신체 건강한 다 큰 아들이 부양할 생각은커녕 늙은 어머니를 폐지 줍게 하고, 심지어 도시락까지 빼앗아 먹는 것인가" 하는 (어쩌면 분노 어린) 의문을 담당 사회복지사와 연구자는 대화 속에서 공감했지만, 그러한 의문은 거꾸로 왜 차 씨가 집 안에 있는 아들의 존재를 굳이 감추고자 하고 1년이 넘도록 연구자와의 면담을 거부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단서이다. 두 사람이 맺어 온 관계의 성격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는 미치지

않더라도 오늘날 한국 사회의 노동 조건과 젠더 역할에 대한 분석 없이, 과연 ‘늙은 어머니’보다 ‘젊은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부양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어떻게 쉽게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모든 자격 기준이 증명 가능한 ‘문서’로 결정되는 국가정책의 논리 속에서, 아들과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차 씨가 도시락 배달 수급자가 되는 일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거동 불편이 도시락 배달사업의 수혜자를 결정하는 또 다른 고려 요인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과정에는 더욱 복잡한 해석과 타협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거동 불편을 둘러싼 해석과 타협의 여지 속에서 어떤 이들은 나름의 전략을 수행한다.

김인숙 씨(76세, 여성)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현금 지원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시락 배달사업의 1차적인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웃 중 한 명이 도시락 배달을 받는 것을 보고 방문한 사회복지사에게 “나는 이제 지병인 당뇨로 인해 눈이 안 보여서 나다니기도 그렇고 밥도 해먹기가 힘들다”고 직접 도시락 배달의 수혜자가 되기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그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지만 동시에 도시락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김 씨는 K복지관 외에도 구청이나 주민센터, 독거노인을 위한 단체, 지역 교회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좋지 않은 시력 때문에 자유자재로 바깥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연구자가 면담 약속을 잡을 때면 ‘매주 화요일은 교회 무료식사와 행사 참여, 매달 둘째 주 월요일은 병원에 가서 약 타오기, 다음 주 목요일에는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 등 자신의 세세한 스케줄을 나열하고는 했다. 또한 전등이 나가거나 벽지에 물이 새면 바로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어 해결을 하고는 하는데, 어떨 때는 연락한 기관이 너무 많아 결국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 왔는지를 헷갈려하기도 했다. 김 씨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도

시락을 전달할 때면 본인이 받는 ‘당뇨식’ 도시락과 다른 사람들의 ‘일반식’ 도시락의 반찬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만일 이웃이 자신이 받지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연구자가 만나 본 K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 중 김 씨처럼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김 씨의 남다른 행위전략은 그녀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녀의 생애이야기는 그녀의 남다른 정보 수집 및 협상능력과 주체적인 태도가 한편으로는 그녀가 가진 높은 학력과 직장 경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 둘을 키우면서 습득해 온 생활 경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례 1] 김인숙 씨, 76세, 여성

김인숙 씨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사로 일하다가 군의관을 만나 결혼한 후 지방 중소도시로 이주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심각한 장애를 얻고 곧 사망하였다. 당시 김 씨는 40세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이 있었다. 병원장이었던 남편의 재산을 탐낸 시가족은 김 씨를 다른 곳에 재가시키려고 했지만, “재혼하지 말고 아들 둘을 대학까지만 보내 달라”던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아들은 놓아 두고 작은아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서울로 올라왔다. 그런데 재산을 맡겼던 친정 가족이 이웃에게 돈을 빌려 주고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남편이 남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그후 김 씨는 가죽공장과 패션공장에 나가 일했는데, 두 번 모두 공장이 망하고 사장이 도망기는 바람에 월급과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다. 그후에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거나 포스터를 붙이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남편의 부탁이었던 두 아들을 대학 보내는 일은 결국 이루지 못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를 마친 뒤 해군에 들어갔고 제대 후 곧 결혼했는데, 김 씨가 세 번이나 수천만 원에서 억 대에 이르는 사업 밀전을 대주었지만 세 번 모두 사기를 당해서 실패하고 말았다. 마지막에는 갖고 있던 금붙이와 한 채 남

은 집까지 팔아서 주었지만, “아들이 돈을 못 버니 며느리가 갈라서자고 해서” 결국 이혼했다. 큰아들은 현재 행방불명이 된 지 3년째다. 작은아들은 공고를 나와 현재 부인과 함께 목공 가게를 하고 있다. 작은아들의 가게도 김 씨가 마련해 주었다. 현재 김 씨에게 남은 재산은 삼천만 원짜리 전세방 하나로, 이 방도 주거용이 아니라 가게용이어서 난방과 소음관리가 잘되지 않고 심지어 물이 샌다. 젊을 때부터 갖고 있던 지병인 당뇨가 점점 심해지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이제는 근처 교회와 병원 외에는 바깥 거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가족 내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마다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해 온 김인숙 씨는 비록 시력이 좋지 않아 바깥일을 하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남다른 정보 수집과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즉 도시락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제외한다”는 복지관의 원칙에 대해서 김 씨는 자신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신체적 장애를 강조함으로써 쉽게 도시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K복지관의 운영자와 사회복지사는 이처럼 자격 요건과 관련한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매번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마다 나름대로 최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란’ 여러 가지 특수한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선정의 기준은 언제나 ‘틈새’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자들은 종종 거센 불만과 항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4년 어느 날 연구자는 우연히 K복지관 관장이 어떤 노년 남성으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항의로 괴로워하는 상황을 접할 수 있었다. 그 남성은 오랜 기간 동안 K복지관의 특정 프로그램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사람이다. 그런데 새롭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이 미리 공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뽑히지 못했다. 그 노년

남성은 자신이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몹시 자존심이 상했고, 심지어 그동안의 자신의 열심과 리더십이 관장에 의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관장도 노년 남성의 태도로 인하여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항의하는 과정 속에서 관장을 '기관의 운영자가 아닌 단순히 '혼인하지 않은 젊은 여성'으로 간주하며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그 노년 남성은 자신의 정당성과 위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복지 제공자와 수혜자가 아닌 '연륜 있는 남성과 젊은 미혼 여성'이라는 한국 사회의 젠더 및 연령 위계 구조 안으로 교묘하게 전치(displace)시킨 것이다.

처음에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이던 그 노년 남성은 나중에는 관장을 찾아와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하였으며, 급기야 복지관의 결정에 대해 여러 상급 기관에 전화를 걸어 문제 제기를 하였다. 자신이 선정에서 제외된 것이 '복지관 관장의 부당한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한 그는 상급 기관에 관장을 고발하고 공정성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 복지관 운영자들과 참여자들 누구로부터도 이 노년 남성의 행동은 지지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해 복지관 활동에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연락했던 상급 기관의 담당자들은 복지관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4. “자식을 낳으면 벌 받는 세상”:

노인복지안의 가족과 젠더 정치학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과정에 존재하는 틈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낙타가 통과해야 하는 바늘구멍'만큼이나 좁고 불가능한 영역일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이나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이 고정적인 현금 수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복지정책의 경우에는 더욱 그 차이가 심각하게 인식된다.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서는 자신이 '낙타'가 아니라 '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의 복지정책의 맥락에서 '실'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서류상 적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K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에 “일단 서류를 준비 하세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현금 수입이 뒤따르는 복지 프로그램의 적격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문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들 모두 '부양 능력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들 각자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왜 이들이 부양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가족관계 단절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난하고 일할 능력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노년의 개인이 자녀들과 '편하게 연락하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가난이나 노동능력의 부재가 갑작스러운 실패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어진 지속적인 삶의 조건이었다면, 자녀들 중에 한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끊겼기 십상이다. 연구자가 만난 도시락 배달 수급자들은 자녀들이 두 명에서 일곱여덟 명에 이르지만, 실제로 자녀 대부분과 드물게 연락하거나 이미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된 상태였다. 그나마 정기적으로 연락이 되는 한두 명의 자녀도 설날이나 추석에만 잠깐 보는 게 전부였고, 가더라도 “며느리(또는 사위)가 굳이 자고 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데” 더 머무르기 불편하여 “밤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날로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 일이 태반이다.

그나마 연락하는 자녀들과도 이 정도의 관계가 일반적인 셈인데, 단지 '가족관계증명'에 등장한다고 해서 이미 연락이 끊기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자녀 심지어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각각 연락하여 어디 사는지를 알아

내고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받기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 왜 이들과 관계가 끊어졌는가를 구청 공무원들이 만족할 만한 '사유서'로 써야 하는 일도 결심한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왜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졌는지, 스스로의 부족함이나 서글픈 팔자를 탓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도 딱히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던 말인가. 보건복지부의 제한된 예산 문제 그리고 “만일 이렇게 엄격하게 서류처리를 하지 않으면 악의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들은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만다. “텔레비전 보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긴 많은가 보더라고 다들 돈 때문에 미쳐 날뛰는 세상이 됐어. 우리 때는 먹을 것 없어도 나눠 먹고 그랬는데, 어찌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했는지 몰라.”

이러한 국가정책의 논리 속에서 몇몇은 자신이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도 않은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억울하거나 쓸쓸한 감정을 넘어 자식들에 대한 분노감이나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2013년 추석을 갖 지나고 박모씨 씨(83세, 여성)를 방문했을 때, 박 씨의 상태는 여느 때보다 더욱 좋지 않았다. 그녀는 불빛 하나 켜 있지 않은 캄캄하고 냉랭한 방 안에서 겹겹이 낡은 이불을 깔아 만든 잠자리 위에 시체마냥 웅크리고 있었다. 항상 켜놓던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다. 박 씨는 익숙한 연구자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조금씩 움직였다. 심각한 우울 증상이 의심되었기에 걱정되어 일부러 반복해서 말을 걸자, 박 씨는 한참이 지난 뒤 겨우 자리에 일어났다. 그녀는 바싹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기어 들어 가는 목소리로 연구자에게 말을 건넸다. 추석에 막내딸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박 씨가 자는 동안에 가방에 모아 둔 현금 50만 원을 빼갔다고 했다.

몇 주가 지났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추석 사건으로 인한 분노와 괴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몸은 좀 나아져서 밥도 해먹고 가까운 바깥

출입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화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지 박 씨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또다시 연구자에게 털어놓았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와. 너무나도 기가 막혀. 그럴 수가 있을까 몰라. (딸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방(이) 돈 벌어 주지, 새끼들 다 대학교 나와서 회사 다니지, 저 돈 벌고 다니지, 그런 인간이 그렇게 병을 걸려서, 환장병을 걸려서. 세상이 왜 그렇게 생긴 건지 모르겠어. 발발 떨어. 떨어. 쌀 한 뒷박 갖고 일주일도 살고, 쇠가리(소갈비) 삶아서 국 삶아서 장국이라는 걸 해 갖고 죽 끓여 놓고 가서 소 물고 와서 그렇게 벌어서 먹고 살았는디 그렇게 모질게, 지가 그렇게 아파트서. 이해도 안 가.

박 씨의 입장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먹을 것을 아껴 가며 딸을 키웠는데, 추석에 오라고 해서 돈을 훔쳐간 딸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박 씨의 말 외에는 추석에 막내딸 집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알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박 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막내딸을 '힘없고 가난한 어머니의 째깍돈을, 그것도 명절에 빼앗아 가는 천하에 불효막심한 X'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딸이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고 믿는 박 씨는 추석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막내딸에 대한 분노, 섭섭함, 짜증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심리적 상실감을 넘어 신체적 고통으로 끙끙 앓았다.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흥분한 나머지 박 씨는 다른 정황에 대한 판단력도 꽤 상실하고 있었다. 그녀는 추석이 한참 지난 이후 연구자가 드린 피면담자 사례비도 추석에 딸이 빼앗아 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박 씨의 상황인식 및 감정 반응의 양상은 병리학적으로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떠나서 '추석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가능성이나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적 능력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지만, 그녀의 생애이야기는

어떠한 맥락에서 그녀가 자식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드러낸다.

[사례 2] 박모지 씨, 83세, 여성

박모지 씨는 전라도 장성에서 다섯째 딸로 태어났다. “학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가마니만 짜다가” 열여덟 살 되던 해에 같은 동네에 사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결혼하고 산 지 한두 해가 흐르고 딸 하나가 있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남편이 죽었다.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하던 박 씨는 곧바로 열여섯 살 많은 “살 줄도 모르고 거지같은” 남자와 재혼했다. 새 남편과는 아들 넷, 딸 둘을 낳았다. 이후 큰딸이 서울로 시집가더니 박 씨 내외를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장성에 있는 두 마지기 논을 “내버리고” 상경했다. 그런데 서울에 오자마자 박 씨는 교통사고로 트럭이 팔을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손과 팔을 쓰지 못하게 되고,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더니”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녀들은 각자 알아서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갔는데, 박 씨를 거의 돌보지 않고 “웬수같이 군다.” 박 씨는 나다닐 수 있을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폐품 수집을 하거나 하수구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왔다. 현재 박 씨는 다세대 주택의 한쪽 구석, 화장실 딸린 작은 방 한 칸짜리 전세 2천만 원짜리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추석 사건’의 사례는 박 씨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만을 보여 주지만,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관찰과 면담자료들은 그녀의 자식에 대한 감정이 사실상 매우 양가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2013년 12월, 추석이 몇 달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식들한테 뭐라 칼 수도 없어. 내가 북한처럼 끔찍한 데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먹었응께. 지들도 일고여덟 살에 다 바깥으로 나와서 살겠다고 이등바등 세금 다 내고 살랑께 힘들지. 그래서 내가 미안한게 뭐라 칼 수도

없어. …부모 복이 없으니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이 없으니 자식 복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거(도시락)라도 먹으라고 해준 거잖어.

그러나 박 씨가 자식들에게 갖고 있는 미안함은 비슷한 형편의 주변 이웃 노년 여성들과의 비교 속에서, 금세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으로 바뀌어 버리고 만다. 똑같이 혼자 외롭게 살고 자식들이 돌보아 주지 않는 비슷한 생활 조건의 이웃들이 다달이 몇십만 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는 것을 보면, 박 씨는 참던 울화가 터지고 만다. 결국 박 씨의 자식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꿈쩍없이 방 안에 한동안 끄끄 드러누워 있”도록 하는 우울증 경험은 개인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녀 자신과 상관없는 환경(전라도 농촌, 다섯째 딸, 한국전쟁)의 영향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즉 빈곤한 노인에게 대한 지원이 실제 자녀의 ‘부양 여부’보다는 문서로 확인되는 자녀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큰머느리가 주일마다 와서는 살살이 뒤져 가지고서는 설탕 하나라도 다 가져가. (큰머느리) 아들이 치공사이고 딸이 고등학교 선생이면 살 만할 텐데도 그걸 다 가져간당께. (큰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닐 때도, 선생님이 뭘 물어보면 번쩍번쩍 손들고 그랬어. (선생님이 큰아들을)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딸 둘이 큰머느리가 집 나가 버리면 엄마가 더 고생이니 참으라고 해서 내가 참어. 자식 없는 사람들은 평평거리고 사는 세상인데, 자식을 낳으면 벌 받는 세상인께. 호적에는 딸 하나만 있는데, 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려. 여기 돌팔이가 하나 있어 가지고

실제로 큰아들과 큰머느리가 박 씨에게 어떠한 돌봄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적어도 연구자가 박 씨의 집을 매주 방문한 1년

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나 아들을 마주친 적은 없었고 서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명절에도 박 씨는 큰아들이 아닌 막내 딸의 집에서 보냈다. 딸들이 “큰며느리가 집 나가 버리면 엄마가 더 고생”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큰아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어쨌든 며느리도 법적인 부양자로 간주되는 한국 복지정책의 논리 속에서 큰아들 가족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박 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며느리의 존재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이혼하기를 바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박 씨의 삶은 가족과 국가 모두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 속에 갇혀 있게 되고 만다. 즉 그녀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탈레마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며느리나 지역 공무원(‘돌팔이’)을 욕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식 없는 사람들은 멍멍거리고 사는 세상인데, 자식을 낳으면 벌 받는 세상”이라는 박 씨의 표현은 자못 극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갖고 넉넉하게 살아왔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다달이 현금 지원을 받는 정섭민 씨의 사례는 실제로 “자식에 대한 책임을 포기해 버린” 사람들이 실제로는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기도 쉽고 “편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오늘날 한국 사회 노년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 준다.

[사례 3] 정섭민 씨, 84세, 남성

정섭민 씨는 광산을 갖고 있던 할아버지와 서울에서 성공한 의사였던 아버지를 둔 외동아들로 태어나 당시 명문인 K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빨치산 친척에 의해 의용군에 끌려갔는데, 여러 위기 속에 탈출에 성공하여 국군에 편입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명문대인 K대를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근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던 중, 당시 자유당 정치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니던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로 (“과거 같으면 감히 통혼이나 했겠느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내무장관의 육촌조카와 혼인하였다. 그러나

정섭민 씨의 결혼생활은 채 3년을 가지 않았다. 이들딸 각각 한 명씩 두 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부인과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했다. 아이들은 부인이 데려갔으며, 헤어진 다음에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그후 정씨는 혼자 중국과 한국을 떠돌아다니며 한약재 판매상을 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젊은 조선족 여성과 재혼하였는데, 결국 부인이 떠나기를 원해서 일찍이 헤어졌다. “부인이 한국을 왕래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혼 서류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만나 주지를 않아서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로 남아 있다. 정 씨는 임대아파트를 배당받아 혼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다달이 15만 원 정도 지급 받는다. 임대아파트 은행 융자에 대한 이자로 다달이 4만 원정도 낸다. 생활비가 많지는 않지만, “이화여대를 나온 지금도 잘사는” 계모나 다른 친구로부터 가끔 도움을 받으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맘에 드는 티셔츠 정도는 편하게 사는 편”이다.

정섭민 씨의 집은 임대아파트로, 다른 도시락 배달 수급자들에 비해 주거 조건이 매우 좋은 편이다. 큰 키와 꼳꼳한 체격에 세련된 빨테 안경을 끼고 있는 정 씨는 언뜻 보더라도 은퇴한 지식인 분위기를 풍긴다. 병원에 갈 때면, 와이셔츠에 양복을 뺏뺏하게 다려 입고 나간다. 집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냄새도 나지 않으며, 심지어 베란다에는 갖가지 화분이 잘 돌보아져서 나란히 놓여 있다. 방 안에는 친구에게 얻은 40인치 평면형 텔레비전이 놓여 있다. 정 씨는 당뇨가 있어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아는 의사를 찾아서 반드시 대학병원을 찾는다. 80대 중반의 나이지만 당뇨와 전립선 이상 외에는 신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얼마 전에 넘어져서 어깨를 다치기 전까지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테니스를 칠 정도로 건강했다.

어찌 보면 남들보다 여러모로 생활 형편이 나은 정 씨가 도시락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웃 여성의 제보 덕분이었다. 그가 “매일같이 편의점에서 김밥과 우유로 끼니를 때운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웃 여성은 K복지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 씨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정 씨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 자신을 위해 애써 준 이웃 여성에게 매우 고마워했다.

밥은 하기 쉽데요. 밥은 제가 해요. 그런데 반찬을 할지 모르니까 도시락을 가져오잖아요, 복지관에서. 그걸로 두 끼 먹죠. 그러니까 인제 간혹 가다 이거저거 넣어서 찌개를 하는데 그거 딱 개죽이예요. 제가 먹어도 그나마 밥 좀 하고 찌개 좀 끓이는 게 등산을 좋아해서 제가 등산을 많이 했거든요. 백두산도 가고 뭐 안간 데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때 식사를, 밥을 해 봐서 밥은 하는데, 예전에 그 복지관에서 가져다주는 잡곡 있어요. 그거를 밥을 하면 익은 것 같지 않게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에 한참 불려서 하라고. 그래서 어제 한 번 불려서 했더니 정말 촉촉해지네요.

정섭민 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서상 자격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족이 없다. 그의 생물학적 자녀는 이혼과 함께 문서상에서 제외되었고, 재혼한 아내의 외국인으로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에게 용돈을 주는 “잘사는” 계모는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정 씨로부터 가족관계에서 분리되었다. 이처럼 정 씨는 문서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부양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한편 정 씨의 사례는 도시락 수급 선정자의 기준인 거동 불편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신체적인 문제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의 ‘성별화된 아버투스(gendered habitus)’를 용인하거나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웃 여성이 정 씨를 안타깝게 여겨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혼자 사는 노년 남성에게는 같은 조건의 여성에 비해 “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고 도시락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정섭민 씨의 경우, 매일 집 안에서 밥을 하고 치우는 번거로움보다는 편의점에서 김밥과 우유를 사먹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습관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자원 동원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적어도 복지정책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K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밑반찬 서비스’ 또한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이 성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이다. 이 서비스는 ‘저녁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성별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반찬을 만드는 자원봉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여성인 반면, 반찬을 받으러 복지관을 찾아오는 분들은 모두 남성이다. ‘벌땀하게 걸어 다니는’ 노년 여성이 “반찬을 만들지 못한다”고 찾아오는 경우는 실제로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여성이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복지담론 속에서 노인은 종종 무성화(無性化)된 존재로서 나타나지만, 실제로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식은 종종 핵가족 내의 젠더 역할을 반영한 성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5. 복지의 위계와 등급화된 노년 주체

지난 11일 오전 10시 K복지관 1층 식당. 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줄지어 도시락을 타고 있었다. 흑한에 두꺼운 점퍼를 입고 온 이들은 뭔가에 쫓기기라도 하듯 도시락을 받아들자마자 종종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인근 지역 홀몸노인(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연배로 치면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받는 어르신들과 큰 차이가 없는 노년이지만, 최근 폭설과 잇단 혹한 속에서 단 한 차례도 도시락 배달을 거른 적이 없다. 이들은 잠시 사진 촬영을 하는데도 “빨리 안 가면 도시락이 식는데...”라고 기자를 보쳤다. 따뜻한 구들장 생각이 간절한 쌀쌀한 날씨지만 “도시락을 배달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에서 사랑의 온기가 피어났다.

윗글은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실렸던 K복지관 도시락 배달에 관한 기사 중 일부이다. “연배로 치면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받는 어르신들과 큰 차이가 없는 노년”인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들 — “폭설과 잇단 혹한 속에서 단 한 차례도 도시락 배달을 거른 적이 없”는 이들의 사랑과 성실함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은 기사에 묘사된 것처럼 단면적이지만도 아름답지만도 않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노년의)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의해 고용된 ‘노년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다양하지만, 특별히 전문가적 재능이나 경험이 없는 노년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은 ‘동네 청소’, ‘아이들 등하교 지도’, ‘도시락 준비나 배달’과 같은 단순노동에 제한되어 있다. 참여하는 이들은 매일 세 시간씩 1주일에 세 번, 한 달에 총 12번의 참여를 통해 매달 20만 원의 현금 지원을 구청에서 받는다. 물론 도시락 배달이 모두 노년의 일자리 참여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40명이 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꾸준히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K복지관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위의 기사에서 묘사된 어르신들의 이웃 사랑과 훈훈함의 뒷면에는 ‘어떻게 하면 보다 수월하게 현금 벌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경제 논리가 늘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K복지관에서 배달이 진행되는 매일 오전 10시 반경, 식당에서 담당 사회복지사와 어르신 간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물론 불만과 항의를 일삼는 사람은 단지 한두 사람에 불과하지만, “왜 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데, 저 사람은 가까운 데로 가라고 하고 나는 먼 데로 가라고 하느냐”, “배달이 힘들니, 다음부터는 부엌 청소하는 일로 바꾸어 달라”, “다음 주에 집에 일이 있으니 저 사람과 내가 1주일만 바꾸어서 하고 싶다” 등, 비록 ‘어머님 · 아버님’이라고 호칭하지만 실제로는 조부모에 가까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

만에 직면하여 20대 여성인 사회복지사는 어찌할 줄을 몰라하다 어쩔 때는 지치다 못해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락 배달자와 수급자 사이의 관계도 기사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사랑의 나눔’이 되기는 참 어렵다. 물론 개인별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돈벌이’를 위해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1차적인 목적은 최대한 빨리 가서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 돌아와 일을 마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대체로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이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도시락을 받아가는 잠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이들은 그저 현관 문고리에 도시락을 걸어 놓고 와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언젠가부터 K복지관에서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복지관 1층에 마련되어 있는 장부에 직접 만났는지의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도시락 배달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연령이 높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독거노인들이 그날그날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락 수급자들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또 다른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서 배달자 자신보다 많은 현금 수입이 있다는 사실은 이 배달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의 나눔’을 하기가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수급자들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루머는 이러한 부러움과 시기 속에서 배태되고는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가봤더니만, 이불 밑에 현금 더미를 숨겨 놔더라”, “냉장고에 음식이 너무 많아 썩어나더라”, “자식들을 불러서 이곳저곳에서 받은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더라” 등 루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들이다. 물론 모든 도시락 수급자가 항상 배달자들보다 상황이 낫지는 않으며,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수급자들은 “아직 젊고 나다닐 수 있어서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버는” 배달자들을 거꾸로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든지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년의 개인들은 ‘복지의 위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계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무엇보다 ‘현금

수입이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1주일에 세 번씩 도시락을 배달하는 최 하연 씨(71세, 여성)의 말이다.

아주 기초수급자 있고, 차상위라고 있고, 그담에 그 9만 원 받는 사람(노인일자
리사업 참여자)이 있고, 그다음에 인텔리로 딱 대학 나와서, 대학 나온 사람들 또
있고, 뭐 왕년에 뭐 했다고 교장 했다, 은행장 있다 아주 천차만별이야. 그래도 오
히려 배운 사람들은 그런 이해는 빨라. 그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좀 불평불만도
많고 우리는 공짜를 주지 말아야 돼. 바라기를 엄청 (하거든). 수급자들은 주는 게
가보면 냉장고에 꼭꼭이예요, 진짜. 도시락(배달) 가서 문 한 번 열어 봐요 그 집
가서. 꼭꼭이예요.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해서 어디서 뭐 준다 그리고 우
리나라 공짜가 너무 많아. 아무리 복지시설을 잘해 준다 하지만 이만하면 살 만
해. 솔직히 이만하면 살 만해. 괜히 자손들한테 빚만 남겨 주는 거지. ...이렇게 많
은 빚, 자손한테, 우리 자식한테 남겨 주면 어쩔 거야. 일본한테 다 뺏겨, 울릉도구
뒀구 뺏겨, 독도도 다 뺏겨, 빚 못 갚아 봐요. 그거 다 뺏기지 않아요? 뭐 바다 섬
도 쪼그만한 거 뺏겼다고 그러더라구. (일본이) 점점 들어와 봐, 어떡할 거야.

최 씨는 11년째 K복지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 복지관
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 씨는 그동안 우수한 자원봉사자
들에게 부여하는 '봉사자상'을 다섯 번도 넘게 받았다. 그녀가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며, K복지관을 방문하는 다른 이들을 웃으며 맞이
하고 도와주는 모습은 언제든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복지관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온 최 씨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 노인 복지정책은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더 많은 빚을 져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도록 하
는" 잘못된 정책이다.

복지관뿐 아니라 구청장이 주는 봉사상도 받았던 최 씨지만, 이제 70대
가 된 그녀도 노년의 삶을 잔인하게 구획짓는 '복지의 위계'로부터 감정적

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남편 병수발을 30대부터 수십 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온 그녀는 비록 여러 봉사활동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단지 집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부당함을 느낀다. 현재 그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는 그나마 K복지관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다는 근거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수급자 안 줘야 돼. 노력 안 해서 수급자 된, 그중에는 안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지만 다 잘 먹고 잘살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같이, 저(는) 옷 남의 것 다 얻어다 입어서 정말 먹을 거 회사에서 다 얻어다 먹고 그렇게 살면서 저축하면서 그 집 장만했어요, 진짜. 잘 먹고 잘 쓰고 집 장만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잡수고 하다가 그렇게 수급자가 되었더라고요.

오늘날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노년생활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노년의 삶이 조금은 더 살 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지만, 거꾸로 행정적 편의를 위해 정책에서 제시하는 논리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만들고 끊임없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만을 생성하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논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의 성격을 변질시키는 데 기여한다. 즉 도시락을 배달할 때마다 느끼던 '보람'은 서로 간의 혜택의 차이를 목격하며 얼마든지 '부당함에 대한 불만'으로 바뀔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순수한 봉사활동'은 어느새 한 폰이라도 벌기 위한 노년의 '경쟁적인 노동활동'이 되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늙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믿음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늙음 앞에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생성하기도 한다.

6. 마치며: 연령주의와 ‘그들만의 리그’

지금까지 서울시 북부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통해,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노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험과 의미를 생성하고, 또한 노인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노년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도시락 배달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없으며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도시락 배달사업에 관여하는 사회문화적 논리들과 다양한 노인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고찰은 한국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이 결과적으로 양성하는 노년 주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이 양성해 내는 노년 주체의 특징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한국 사회의 노인복지담론 속에서 ‘노인’은 ‘법적 연령 65세 (혹은 사업에 따라서는 60세)’라는 역연령에 의해 정의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연령주의는 복지행정을 수월하게 할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내세우는 사회통합의 의도와는 달리 노년 주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연령주의는 정치인이나 기업 경영인처럼 연령주의로부터 피해 갈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노년의 남녀가 단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자유 경쟁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정당화한다.

연령주의에 기초한 정책담론 속에서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고 화폐로 환원될 수 있는 가치를 생성하지 못하는 노년의 남녀는 진정한 ‘사회적 주체(social subject)’가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질병이나 가난이 몸에 각인된 ‘생물학적 신체(biological body)’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 주체들이 유일하게 다른 이들처럼 의미 있는 사회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가 되는 것이다(김태우 2012). 이처럼 연령주의는 각

자가 갖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상관없이 노년 주체가 단순히 '보살핌의 대상'으로 전락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노동 주체가 아닌 보살핌의 대상이 되기를 요구하는 복지담론의 기획은 그 보편적인 메시지와는 달리,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노년 주체 간에 경쟁을 유발시키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행정적 편의주의와 젠더 정치학의 논리에 따라 구분한다. 이러한 정책적 전략은 결과적으로 노년의 남녀가 스스로를 주체화하도록 독려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더 타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으로 강화시키는 '반주체화' 전략을 구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반동적이다.

이처럼 역설적으로 복지정책의 논리를 통해 사회적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노년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이미 '사회적 주검(social corpse)'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사회적 주검인 노인에게 있어서 삶이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점차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일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그들의 삶은 죽음을 미루든지 죽음으로 치닫든지 늘 삶이 아닌 죽음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노인 자살은 그다지 놀라운 현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도시락 배달사업 속의 '도시락'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따뜻한 인심'이 될 수도 있지만, 단지 생물학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명치료'의 모습을 띠는 점에서 노년의 개인을 사회적 주체로 활성화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노인복지담론이 노년의 남녀를 사회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노인복지담론은 이들을 사회적 공간의 한 귀퉁이에 '그들만의 리그(a league of their own)'를 꾸릴 수 있도록 장(field)을 제공하고 활동을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 혜택들은, 마치 놀이공원에서 어린이들에게만 제공하는 무료 아이스크림이나 솜사탕처럼, 일상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폭력은 도외시한 채 무료 사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벤트성'을 띤다. 그러

나 무료 솜사탕에 즐거워하며 매일같이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하는 어린 이들이 적지 않듯이, 많은 노년의 남녀들도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과 프로그램에 환호하며 적어도 이 공간은 그들을 위해 마련된 안전한 곳이라는 점에서 안도한다. 물론 이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선물은 기초수급이든 노인일자리어든 금전적인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임은 굳이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은 놀이공원이 아닌 바깥세상에서도 대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아이টে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같이 놀이공원에 가던 어린이도 언젠가는 부모를 그리워하게 되듯이, 복지관에서 웃고 떠들던 노년 남녀들도 그곳에만 자신의 삶이 한정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울적하거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들만의 리그’는 독특한 규범을 갖고 있다. 언뜻 보기에 도시락 배달 사업 안에는 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어사업 참여자, 도시락 배달 수혜자 등 같은 노년 참여자라고 하더라도 복지 공급자와 복지 수혜자를 구분하는 나름의 구별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복지정책의 논리일 뿐이고, 실제로 활동하는 주체들은 이 모든 범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그 경계는 모호하고 역할은 중첩된다. 우선 복지관 직원을 제외한 모든 노년의 공급자와 수혜자는 똑같이 사회로부터 배척된 존재들이고 생물학적으로 죽어 가는 신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처음에는 보수를 기대하지 않는 자발적 참여 의지에서 배달을 시작했는지 몰라도 점점 복지정책의 논리 속에서 자원봉사 경력이 다른 현금성 일자리의 기회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게 되며, 만일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지거나 가족관계의 변화에 직면할 경우 도시락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역할의 중첩과 경계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의 논리 속에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는 까닭은 제한적인 국가 예산으로 인해 ‘보살핌의 대상’인 ‘노인’이 행정적으로 늘 선정되고 구별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는 노년집단 안에 자발적 행위자를 양성함으로써 그들의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만의 리그’에도 성원들 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가 노년이 되기 전에 누렸던 삶의 조건, 지위 그리고 체화된 습관들로 인한 차이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65~100세를 넘나드는 그들이 경험한 역사적 시간차를 무시할 수 없지만, 동시에 계급적·성별적·지역차별적이다. 예컨대 정섭민 씨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서울에서 교사생활과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84세인 지금도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자본을 통해 ‘노인’이지만 제한된 방식이나마 남다른 ‘사회생활’을 누리고 있다. 또한 그가 가진 남성으로서의 지위와 삶의 습관은 그의 신체적 조건과 경제적 자원과는 별도로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된다. 반면 박모지 씨는 정섭민 씨와 비슷한 83세의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시골구석에서 소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가마니만 짜다가 부모의 뜻에 따라 시집을 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그녀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일곱 명의 자녀를 키웠지만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기는커녕 비난만 듣고 산다. 또 자유로운 독신을 선택한 정섭민 씨와 달리, 여전히 서류상 기록되어 있는 자녀들의 존재로 인해 그녀는 기초수급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결국 노인복지담론은 연령주의를 통해 노년이 “늙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지만, 실제로 노년의 개인은 그들이 살아온 계급적·성별적·지역차별적 삶의 궤적이 체화된 ‘신체적 자본(bodily capital)’을 통해 복지정책에 대해 위계화된 권리를 누린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노년의 ‘예기치 않은 위협’이 늘 강조되고, 이러한 담론은 기존 사회의 위계와 차별이 노년의 삶에 무의미한 요소인 것처럼 ‘나이 듦에 있어서의 평등(equality in agedness)’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지만, 유엔도 인정한 바와 같이 노년의 삶에서 “가난은 세계 최고의 살인마(poverty is the number one killer)”이며 개인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 대우와 혜택을 누린다. 그렇지만

노년의 동질성을 부각시키는 사회적 담론으로 인해 이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교묘하게 감추어지고, 그러한 은폐는 결과적으로 노년의 개인 간에 존재하는 차별을 묵과하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사회로부터 배척되고 차별받으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 수밖에 없는 노년 주체들은 그러한 부정적 경험 속에서도 노년의 사회적 공간 안에 존재하는 차별과 위계를 떨쳐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대개 그 논리에 포섭되고 과거의 경험에 기대어 경쟁적 개인 주체로 살기를 선택한다. 결국 노인복지의 담론 속에서 '나이 들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는 비판적 힘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은 개인 간의 계급적·성별적·지역차별적 위계와 차별에 대한 주체들의 암묵적 동의를 통해 소멸되어 버린다. 그리고 같은 논리 속에서 노년의 삶이 사회에서 왜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고영미 · 조영태, 2013, “일반 독거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간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차이,”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0(2): 41-53.
- 김경혜, 2014, “서울노인의 경제 · 사회적 결핍 실태와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정책리포트』 167: 1-19.
- 김광역, 2012, 『문화의 정치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안동과 안동 김씨』,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주현, 2009,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82: 361-391.
- 김태우, 2012, “노년에 대한 현대의학의 개입: 문화인류학이 바라본 당대의 노년,” 『서양사론』 114: 5-28.
- 김태한 · 고준기, 2013,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 『법학연구』 16(1): 167-198.
- 김형수, 2000,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전망과 대책,” 『현상과 인식』 23(4): 80-99.
- 나향진, 2006, “노인들이 구성하는 학습의 의미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교육 인류학연구』 9(1): 1-28.
- 노용환 · 이상영, 2013,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 7-18.
- 박광준, 1999, “고령화사회와 사회정책,”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3(1): 9-63.
- 보건복지부, 2014, “‘OECD Health Data 2014’ 주요지표 분석,” 보건복지부.
- 선우덕, 2005,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택림, 2001, “한국 근현대사 속의 농촌 여성의 삶과 역사 이해: 충남 서산 대동리의 여성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9: 207-234.
- _____, 2011, “구술사 인터뷰와 역사적 상흔: 진실 찾기와 치유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30: 381-406.
- 정순돌 · 김성원, 2012, “사회복지학 분야 ‘고령화 사회’ 연구동향: 인식과 대책,” 『사회과학연구논총』 27: 275-311.

- 정순돌 · 박현주 · 김보경, 2011, “‘고령화 사회’에 관한 인식과 대책: 신문기사를 통해 본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4): 203-224.
- 정진웅, 2006, 『노년의 문화인류학』, 파주: 한울
- _____, 2011, “노년 호명의 정치학,” 『한국노년학』 31(3): 751-765.
- 정희진, 2003, “나이 듦, 늙음 그리고 성별,” 『당대비평』 22: 338-351.
- 조문영, 2001, “빈민지역에서 ‘가난’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난곡’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7: 227-261.
- 최호림, 2010, “월남전 참전용사의 전적지 관광과 전쟁기억의 재구성,” 『비교문화연구』 16(2): 71-114.
- 통계개발원, 2007, “노인 자살의 현황과 원인 분석,”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12a, “고령자통계,” 통계청.
- _____, 2012b,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 · 복지 Issue & Focus』 72: 1-8.
- _____, 2013, “OECD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195: 141-154.
- 현외성, 2002, “한국의 정치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연구』 17: 7-25.
- Castles, Francis G., 2002,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Crisis Myths and Crisis Rea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32(2): 255-277.
- Cohen, Lawrence, 1994, “Old Age: Cultural and Critical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3: 137-158.
- OECD, 2014, “OECD Health Statistics 2014,” accessed on August 25, 2014.

〈자료〉

- 『뉴시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돈 안 되는 공공분야 일자리 태반,” 2013. 10. 29 일자.
- 『서울신문』, “4년마다 꺼내는 노인공약 ‘판박이’,” 2012. 4. 16일자.

국문초록

〈주요용어〉 노인, 복지, 주제 형성, 노년 주체성, 국가정책, 한국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한국 사회의 노인복지담론과 실천은 새로운 노년 주체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년의 행위자들은 이러한 담론과 실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며 자신들의 일상과 주체성을 구성해 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고자 연구자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시 북부 지역에 위치한 K복지관의 도시락 배달사업에 매주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행위와 태도를 관찰하였다. 또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총 28명의 노년 남성과 여성 및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불편함'의 기준은 국가기관 및 다양한 참여자의 논쟁과 협상을 통해 그 의미가 정해지며, 그 결과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틈새는 노년의 개인들이 복지정책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둘째, 복지정책의 행정 편의주의는 문서로 표현될 수 없는 노년 개인의 복잡한 삶의 맥락들을 간과하고, 결과적으로 젠더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노년 개인을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노인복지 정책은 노년 집단 안에 새로운 형태의 위계와 차별을 생성하고 개인 간의 경쟁 관계를 조장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노인복지담론은 연령주의를 통해 '나이 들에 있어서의 평등'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지만, 복지정책의 실행 속에서 노년 주체는 더 많은 권리 획득을 위해 기존의 차별 논리에 기대어 경쟁적 주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이들의 삶은 노인복지담론이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Abstract

Key words: the aged, welfare program, subject formation, elderly subjectivity, state policy, South Korea

Welfare Programs and the Formation of New Elderly Subjects in South Korea:

A Lunchbox Delivery Project in a Seniors' Welfare Center

Lee Hyeon Jung*

In the face of an aging society, how do the discourse and practice of welfare programs for the aged influence the formation of a new type of elderly subjects in South Korea? And how do the older actors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respond to the discourse and practice, and construct their daily lives and subjectivity? To answer these questions, I observed the behavior and attitudes of program participants while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of lunchbox delivery in a seniors' welfare center located in northern Seoul from February 2013 to June 2014. I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 total 28 male and female elderly participants and program activis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ings of financial difficulty and physical discomfort, the two official criteria that determine beneficiaries of the welfare program for the aged, is ambiguous and open space for negotiation and debates among state agencies, program activists, and elderly candidates. Second, the administrative expediency of the welfare program tends to overlook the complex lived experiences of older individuals and as a result, contributes to reinforcing the social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class, and regional difference. Third, b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vesting the elderly with graduated subjectivity,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contributes to creating a new type of hierarchy and discrimination and promotes competition between individuals. To conclude, although the welfare discourse for the aged propagates the ideology of 'equality in agedness' in the logic of ageism, it paradoxically promotes competitive elderly subjects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ultimately reducing the likelihood of building new communal values and modes of life for the elderly.